

- ① 노테봄(Nottebohm) 사건
- ② 트레일 스멜터(Trail Smelter) 사건
- ③ 비호권(Asylum) 사건
- ④ 로터스(Lotus)호 사건

문 11. 「1982년 UN해양법협약」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?

- ① 대륙붕제도 ② 군도수역제도
③ 심해저제도 ④ 배타적 경제수역제도

문 12.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효는 무주지(無主地)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② 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.
③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.
④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'실효적 지배'(effective control)가 요구된다.

문 13.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.
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.
③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.
④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.

문 14. 국제환경법상 '차별적 공동책임'(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.
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.
③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
④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.

문 15. 국제연합(UN)의 2001년 '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.
②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.
③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
④ 입법·사법·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
문 16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.
②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.
③ 선택조항(ICJ규정 제36조 2항)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(강제)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④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.

문 17.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'시기상조의 승인'이라고 한다.
② 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(Tobar Doctrine)란 일단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.
③ 1933년 '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'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'항구적 인구', '일정한 영역', '정부' 및 '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' 등을 제시하고 있다.
④ 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.

문 18.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?

- ① 정부조달협정 ② 농업협정
③ 위생 및 검역협정 ④ 기술장벽협정

문 19.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게만 인정된다.
②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, 이사회(집행기구), 사무국의 조직을 갖는다.
③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.
④ 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현장이 명시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문 20. '정치범불인도 원칙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② 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③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④ 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